

## 1. 쇠고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 당초 8월 1일, 4일로 예정되었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따른 여야 입장차이로 인해 파행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총리와 부총리, MBC PD수첩 제작진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채택을 요구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 또한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가 정부의 문서제출 비공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위가 요청한 추가협상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입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220여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부는 단 1건만 제출했으며, 이는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여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또한 치열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의 제출안이 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야당은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QSA가 30개월령 이상의 수입을 금지할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가축법 개정을 통해 재협상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국내법으로 외국과의 조약을 불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제분쟁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 국정조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협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가축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의 대책의 실효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농업의 발목을 잡는 생산비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

- 최근 유류세, 비료,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농가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유류세의 경우 정부가 유류세 환급을 골자로 한 유류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환급 기준이 턱 없이 높아 현장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②비료의 경우 비료차손제도 폐지 후(05년 7월) 비료 가격은 최소 3~4배 폭등하여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비료가격 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현장 농가들의 불만 팽배해 있다. ③사료가격의 경우에도 농협중앙회가 28일을 기해 17~20% 농협사료 가격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농가의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 이에 농업계는 생산비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①유류세(농업용 면세유)는 정부의 공시 가격 보전 기준을 조정해야 하며, 농협 면세유 취급수수료 철폐하거나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료가격은 ②정부가 비료가격상승 가격을 전액 보조하는 ‘비료차손제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료차손제도 부활시 정부는 유기질비료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에게 용자금 지원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농협중앙회는 화학비료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③사료값 폭등과 관련해서는 정부, 농협, 업계, 농가가 부담하는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한 농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구화 ▲축산시설 및 발작물재배용 농사용전기의(갑) 적용이 생산비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